2026 - 9호
(2026. 11월 둘째 주)

정책동향

- 국정 동향
- 시정 동향
- 타 시·도 동향

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

목 차

Ⅰ. 국정 동향 ····· 1

1【교육부】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, 지방정부 조례로 조정 가능 ·····1

2【국토교통부】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…임차보증금 1/3 회복 지원 ···· 2

3【해양수산부】 '27년 어촌뉴딜 3.0 전국 40곳 선정…전남광주 13개 사군 선정 ·····3

Ⅱ. 시정 동향 ····· 4

1【에너지산업본부】 나주 인공태양 연구시설, 1조 4,800억 원 국책사업 예타 통과 ·····4

2【경 제 국】 1,313억 원 지역성장펀드 결성…지역기업 투자 확대 ····· 5

3【시민주권본부】 통합특별시 출범일인 7월 1일 '시민의 날' 지정 추진 ····· 6

Ⅲ. 타 시·도 동향 ····· 7

1【경 기 도】 기업 현장 애로를 법령 개정안으로 구체화‥ '기업 규제통역제' 추진 ···· 7

2【인 천 시】 2027년부터 공공시설 무료 생리대 비치…누구나 이용 가능 ····· 8

3【전 북 도】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‥산업용지 확대공공주도 매립으로 개발기간 단축 ···· 9

국 정 동 향

1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, 지방정부 조례로 조정 가능

- 교육부는 11월 10일 **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**됐다고 밝힘. 이번 개정은 지역별 보육 수요를 고려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 조정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자율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.

- **기존**에는 **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 설치**해야 했으나, 앞으로는 **지역의 영유아 수와 보육시설 수급 여건에 따라 500~1,000세대 범위에서 의무 설치 기준**을 **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.**

- 이에 따라 영유아 수가 적거나 기존 어린이집에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는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. **예를 들어 조례로 기준을 800세대로 정하면 500~799세대 공동주택은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.**

- 또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 제한을 폐지해 지역 여건에 따라 위원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.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보육환경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함.

2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…임차보증금 1/3 회복 지원

- 국토교통부는 11월 13일부터 **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회복을 지원**하는 **‘최소보장제’를 시행함.**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에 따른 조치로, **최소지원금**과 **선지급·후정산 제도**로 구성됨.

- **최소지원금**은 **경·공매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**하는 제도임.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중 1천만 원을 회수했다면 약 2,333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음.

-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한 피해자에게는 **선지급·후정산 제도**를 적용함. **경·공매가 완료되기 전에도 보증금의 3분의 1 상당을 먼저 지원**하고, **기존 회수금액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반영해 정산**함.

- 신청은 **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**하며, **13일부터 LH 지역본부 현장접수도 병행**함. 최소지원금은 경·공매 종료 또는 경매차익 산정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, 선지급금은 경·공매 종료 전에도 신청 가능함.

-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,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. **제도 시행 이전에 경·공매가 종료된 피해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**받을 수 있으며, **지방정부 지원금과 금융지원은 최소지원금 산정 시 피해회복금에 포함되지 않음.**

3 '27년 어촌뉴딜 3.0 전국 40곳 선정…전남광주 13개 사군 선정

- 해양수산부는 11월 9일 **2027년도 '어촌뉴딜 3.0' 신규 사업 대상지 전국 40곳**을 발표함. 어촌경제도약형 5곳, 어촌회복형 35곳이 선정됐으며, **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는 13개 시·군의 16개 사업지가 포함**됨.

- **어촌경제도약형**에는 **고흥군 나로도항**과 **장흥군 회진항**이 선정돼 **2031년까지 개소당 최대 300억 원(국비 150억 원 이내)이 투입**될 예정임. 나로도항은 스마트 양식장과 수산물 가공지원센터를, 회진항은 해양레저 체류시설과 청년 창업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임.

- **어촌회복형**에는 **목포·여수·순천·완도 등 13개 시·군***의 **14개 사업지가 선정**됨. **2030년까지 개소당 최대 100억 원(국비 70억 원 이내)**을 지원해 주민 공동시설과 돌봄·건강관리 등 생활서비스를 확충하고, 방파제·물양장 등 어항 안전시설을 개선할 계획임.

  * **13개 시군** : 목포, 여수, 순천, 완도, 고흥, 장흥, 강진, 무안, 보성, 신안, 진도, 함평, 해남

- 한편 정부는 **2028년도 공모부터** 사업유형을 **기존 2개에서 4개로 세분화하여 개편**하고, **국비 집행률과 준공시설 활용 실적을 선정 평가에 반영**할 계획임. 또한 사업 선정부터 시설 운영·사후관리까지 전 주기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임.

시 정 동 향

1 전남광주, 인공태양 연구시설 예타 통과‥부지 매입 및 연구단지 조성 추진
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1월 5일 **나주 인공태양(핵융합에너지) 연구시설 구축사업**이 **국가 예비타당성조사**를 **통과**했다고 밝힘. **2027~2036년 총사업비 1조 4,813억 원을 투입**해 100MW급 한국형 혁신핵융합 실증로 건설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개발할 계획임.

- 연구시설은 **나주시 왕곡면 덕산리·신기리·양산리 일원 약 53만 4천㎡에 조성**되며, **예타 과정에서 당초 103만 4천㎡에서 축소된 약 50만㎡에는 별도 핵융합 연구단지 조성과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**할 계획임.

- 나주시는 **2027년 1월까지 감정평가, 2월부터 협의매수를 추진**해 2028년 2월까지 정부에 부지를 제공할 예정임.

- **연구시설이 조성되면 연구인력 2천 명 이상이 상주**하고, 국내외 연구자 2천~3천 명이 매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.

- 한편 **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월 11일 나주 KENTECH를 방문해 에너지 특화도시 조성방안을 논의**함. 나주시는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제시했으며, 정부는 연구개발 협력과 기술사업화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임.

2 전남광주, 1,313억 원 지역성장펀드 결성…지역기업 투자 확대
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1월 11일 국립순천대학교에서 열린 ‘2026 전남광주창업페스티벌’에서 **1,313억 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결성**함. 지역 창업·벤처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, 지역 간 통합 모펀드 중 최대 규모임.

- 이번 펀드는 **정부 모태펀드 750억 원과 특별시·시군·금융기관·대학·기업 등 16개 기관의 출자금으로 조성**됨. 오는 12월부터 **추가 민간자금을 유치**해 **약 2,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**할 계획임.

- **펀드 결성액의 60% 이상을 지역기업에 의무 투자**하며, 향후 **3년간 약 1,000억 원을 지역 유망기업과 이전기업 등에 투자**할 계획임. 주요 투자 분야는 인공지능(AI)·반도체·모빌리티·에너지·첨단바이오 등임.

- 한편, **이번 창업페스티벌에는** 창업기업과 투자사 등 총 700개 사가 참여했으며, **지역 창업기업 14개 사가 투자사와 총 734억 원 규모의 실투자 협약을 체결**함. 투자설명회와 1대1 상담 등을 통해 기업과 투자사 간 교류도 진행함.

- 아울러 **한국벤처투자 서남권 투자센터를 개소**해 **지역 유망기업 발굴과 투자사 연계를 지원**함.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투자·융자·보증을 연계하는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고,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.

3 전남광주, 통합특별시 출범일인 7월 1일 '시민의 날' 지정 추진
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**특별시 출범일**인 **7월 1일**을 **'시민의 날'로 지정할 계획**임. 시민 의견수렴 결과와 통합특별시 출범의 역사적 의미, 지역 간 화합과 통합의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함.

- **시민 의견수렴** 결과, **7월 1일은 여론조사에서 47.5%**, 추가조사에서 62.5%의 지지를 얻어 두 차례 모두 선호도 1위를 차지함. 특히 전남광주 모든 권역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함.

- **추가조사**는 시민소통 온라인 플랫폼, 주민자치위원, 27개 시·군·구 공무원, 국내외 향우 등 **6,879명을 대상으로 실시**했으며,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의 날 지정 방침에 반영함.

- **시민의 노래는 별도 상징물로 지정하지 않고**, 두 차례 조사에서 선호도 1위를 차지한 **'임을 위한 행진곡'을 시민의 날 기념식과 정례조회 등 공식 행사에서 활용**할 계획임. 행사 성격에 따라 다른 노래도 함께 사용할 방침임.

- 특별시는 「**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날 조례**」 **제정을 추진**하고, 7월 1일을 특별시 출범을 기념하는 대표 기념일로 운영해 시민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높일 계획임.

타 시·도 동 향

1 경기도, 기업 현장 애로를 법령 개정안으로 구체화…기업 규제통역제 추진

- 경기도는 **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사항을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연결**하는 **'기업 규제통역제'**를 2027년부터 추진할 계획임. **기업의 법령 분석과 개선 건의서 작성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**임.

- **기업**이 **경영·기술 현장의 어려움을 제시**하면 **경기도가 관련 법령과 규제 원인을 분석**하고, **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에 구체적인 규제개선안을 건의하는 방식**으로 운영할 예정임.

- 경기도는 11월 4일 네이버·현대위아 등 기업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함. 네이버는 보안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공간정보를 제공할 때 물리적 저장매체 대신 암호화된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 개선을 제안함.

- 현대위아는 주차로봇 상용화를 위해 현행 기계식주차장치와 구분되는 '지능형주차장'의 법적 개념 신설을 제안함. 로봇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별도 규정 마련 필요성을 설명함.

- **경기도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기업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, 전문가 자문을 통해 법령 개정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**임. 향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 2027년부터 제도를 추진할 방침임.

2 인천시, 2027년부터 공공시설 무료 생리대 비치…누구나 이용 가능

- 인천시는 **2027년부터 공공시설에 생리대 지급기를 설치**하고 **무료 생리대를 제공**하는 **‘공공생리대 지원사업’을 추진**함. **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생리대가 필요한 시민 누구나 이용**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지원사업임.

- **설치 대상**은 **행정복지센터, 도서관, 청소년·체육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**임. 지급기에는 **‘공공생리대’로 표시된 중형 생리대 1팩(2개입)을 비치**해 외출 중 필요한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.

- **사업비는 성평등가족부 국비를 포함해 총 28억여 원**으로, **인천시와 군·구가 공동 추진**함. 군·구별로 지급기 설치 장소를 확정하고, 설치가 완료된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임.

-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해 시와 군·구 누리집에 생리대 지급기 설치 위치를 안내하고, 시설 입구에도 안내문을 부착해 누구나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.

- 또한 자동지급기의 실시간 재고 확인 기능을 활용해 이용 현황과 물품 수급을 관리하고, 시설별 이용 실적과 시민 의견을 반영해 설치 장소와 생리대 비치 물량 등을 조정하는 등 운영체계를 개선할 계획임.

3 전북도,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·산업용지 확대공공주도 매립으로 개발기간 단축

- 전북특별자치도는 제35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의결된 「새만금 기본계획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함. **개발 완료 목표를 기존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앞당기고, 민간투자 중심의 개발방식을 공공주도로 전환**함.

- 변경안은 2035년까지 산업용지를 기존 23㎢에서 37.5㎢로 확대하고, 군산·김제·부안 지역에 분산 배치해 조기 공급하도록 함. 이차전지 기업 입주와 첨단산업 투자 확대에 따른 산업용지 수요를 반영한 것임.

- **개발방식**은 민간사업자 중심의 매립에서 **새만금개발공사가 주도하는 공공개발 체계로 전환**함. 새만금개발공사가 **공사채 발행을 통해 매립 재원을 직접 조달**하고, **2035년까지 매립과 부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**임.

- 기업 투자와 산업·관광 등 **복합개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유보지 12.2㎢를 도입**함. 사업기간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우선 매립지역을 정하고, 향후 투자 수요에 따라 산업·도시·관광용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임.

- 아울러 첨단기업 유치에 필요한 전력·용수 기반시설과 도로·항만·철도 등 교통·물류망 구축계획을 반영함.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변 도시 간 교통 연계를 추진하고, 배수갑문 증설과 조력발전 등 환경·수질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임.